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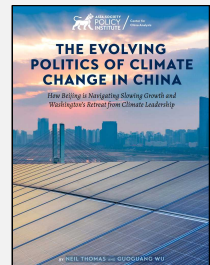
## “중국 기후변화 정치의 진화: 둔화된 성장과 미국의 기후 리더십 후퇴 속 베이징의 대응”

“The Evolving Politics of Climate Change in China”

» **저자** : Neil Thomas, Guoguang Wu

» **일자** : 2026년 2월 18일

» **출처** :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https://asiasociety.org/policy-institute/evolving-politics-climate-change-china-0>



- ❖ 이 보고서는 중국의 기후정치가 최근 경제 둔화, 미중 경쟁, 미국의 기후 리더십 약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어떻게 재조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 분야의 선도국으로서 글로벌 기후정치에서 핵심 행위자이며, 이러한 이중적 위치 속에서 경제성장과 기후정책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 ❖ 최근 중국의 기후전략은 구조적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 중국 정부는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달성과 2060년 탄소중립이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책의 중심은 단기 배출 감축에서 녹색산업 성장 촉진으로 이동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조 등 산업 확대가 경제성장 동력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배출 규제 강화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기후목표 달성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 정치적·관료적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난다. 기후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지도부의 역할은 유지되었지만 정책 추진력은 약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고위 지도자는 국제 기후외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 배출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은 제한적이다. 일부 핵심 기후 협상 담당자의 퇴임과 조직 내 권한 분산은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반면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의 승진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은 기술적 정책 역량이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 국내 정책에서는 경제성장 압력이 기후정책 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동산 위기, 지방재정

부담, 수요 부진 등 경기 둔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산업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석탄발전소 건설을 확대하는 등 배출 증가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에너지 효율과 탄소 집약도 감축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으며 환경 감독 역시 탄소감축보다 전통적 오염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 ❖ 경제정책과 기후정책의 결합은 녹색기술 중심 발전 전략으로 나타난다. 중국 지도부는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품질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녹색산업을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향후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도 배출 감축 자체보다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 산업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 ❖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와 다자기후체제 약화가 중국에 외교적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지속가능 발전의 수호자로서 기후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리더십은 경제적 계신과 녹색기술 수출 확대 전략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국내 배출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전략적 성격도 갖는다.
- ❖ 종합적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산업경쟁력, 에너지안보, 국제적 위상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기후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단기적 배출 감축보다 녹색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전환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글로벌 기후 대응 속도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지만 동시에 녹색기술 확산을 통해 장기적 탈탄소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